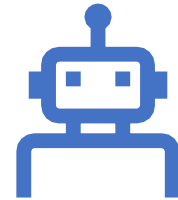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과 경제민주화>
김종인의 기업관과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

2020. 10. 21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O 경제민주화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 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은 익히 알려진 사실
- 코로나 19 펜데믹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기업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때에 야당 대표 그것도 보수정당 대표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는 커녕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지금이 '경제민주화'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정치상품을 정책에 반영시킬 호기(好機)라고 보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움



경영계의 호소, 엄살 인가?

-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넘쳐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9)

-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모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0.9)

○ 김종인의 자학적(自虐的) 기업관



-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9.26)에서 “기업을 국가경제의 합리성이란 개념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힐난. 시대가 달라져 기업들의 행동 방식이 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함
-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팔이’를 위해 기업과 국민마저 인질로 잡는 ‘정책의 합리성이란 개념은 안중’에 없는, 시대가 변해도 과거에 쫓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직적 사고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음

○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강자의 '약자 고스프레'

- 김종인의 지론, "경제력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넓어져 경제세력을 정치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경제권력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 한다**"는 것
- 김종인은 '축적된 부를 이용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 (plutocracy)'를 들먹임.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에 의해 '경제의 합리성'은 압살(壓殺)되어 왔음**
-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 한다'는 주장은 **강자의 '약자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음**
- '**경제 권력의 탐욕**'은 무지(無知)하거나 시장을 오독(誤讀)한 결과. 오히려 인간과 정치가 탐욕적

경제권력은 무엇인가?

-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계속기업'(going concern)이 될 수 없음. 소비자가 물건을 사주어야 생산비를 회수할 수 있고, 투자자가 회사채 또는 주식을 사 주어야 자본을 조달해 공장을 세울 수 있음. 따라서 경제 권력은 '기업 경쟁력'의 다른 표현
- 경제 권력은 경쟁을 통해 스스로를 견제. 과거 초일류 기업이었던 노키아, 코닥, 소니 등이 몰락. 이는 기업 경쟁력, 즉 경제권력이 '상수(常數)'가 아님을 보여준 것.
- 경제권력 내부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1주1표가 아닌 1인1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모든 기업을 협동조합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닐 것임

- “경제권력 내부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제의 의사결정 권한을 당사자인 경제조직(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논리에 맞음
-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경제운영 전환도 경제민주화일 수 있음. **경제민주화는 경제 권력을 정치권력에서 시장경제에 되돌리는 것임**

0 기업을 심 (心)정지 상태로 몰고 갈 기업규제 3법 독소조항

- 비상한 시기에 발의된 기업규제 3법은 기업을 심(心)정지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음
- 이들 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 과거에 잘못된 법이 갑자기 현재 옳은 법이 될 수 없음
- 정부 여당이 국회의원 176명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
-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상품을 팔기 위해 이들 대열에 합류한 종범(從犯)으로 인식될 것임

○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중대담합 사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부문 자산5조원이상 그룹 규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률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 관리 체계 구축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률 요건 상향	감시위원 선임 해임시 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 정비	금융그룹차원 자본적정성 점검

삼성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유도가 왜 공정경제인가?

○ 왜 이제 노동개혁을 얘기하는 지

- 문재인정부는 반(反)자유주의 정부. '자유'의 가권력 장악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적 성향을 보임
- '자유가치'는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함.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야 하는 가
- '**기울어진 운동장**'은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연원.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 해고자 노조원 복귀 시도가 왜 공정경제인지
- '**기업규제 3법 원칙적 찬동**'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여론 반전을 위해** 노동개혁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경제민주화 논의, 외화내빈한 이유



- 경제민주화 개념은 독일에서 유래된 것. 그렇다면 **‘노동자의 경영참여’ 내지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협조적 행위’(concerted action)**로 해석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용어로서,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었음. 일종의 신앙으로, 논증 없는 확신이 거의 전부**

-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논거'가 진지하게 제시된 적이 없었고, '당위성'만 되풀이. 부족하다 싶으면 '패러다임, 시대정신, 헌법 가치'가 동원
-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 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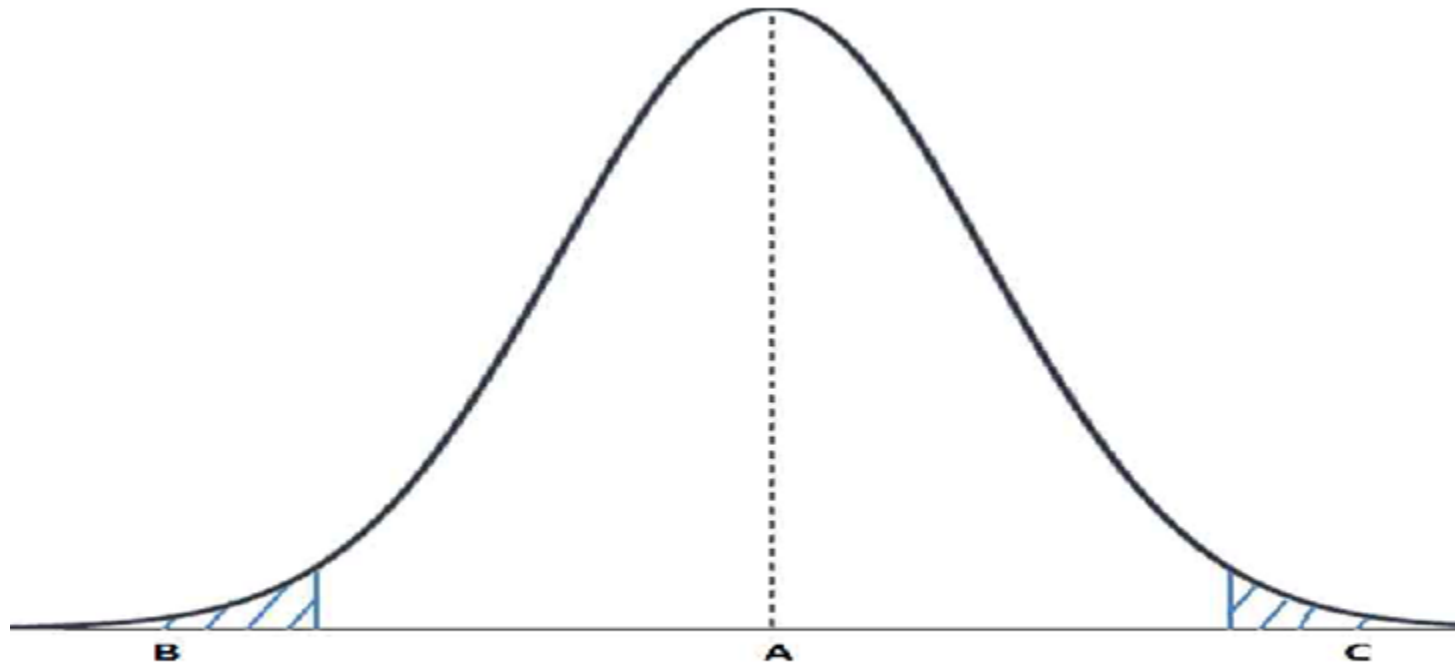
- 1항과 2항을 합하면, '자유와 창의'를 기본질서로 하되 필요하면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가 됨
- 이는 (원칙이 보칙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으로 '원칙과 보칙'의 관계
- '필요한 경우'는 '경제의 조화'로 압축될 수 있음
- 경제민주화란 정치 용어보다 더 의미 전달이 잘 됨

경제민주화의 근거, 헌법 제119조 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편의상,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를 빼고 적으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됨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를 빼더라도 의미전달에 문제 없음
- 규제와 조정 수단은 “**소득재분배 및 공정거래정책**” 등 개별정책. **부족하면 개별정책의 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이를 ‘경제민주화’로 통칭할 일은 아님**

경제민주화로 경제력집중과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나

- 빈곤 vs 불평등: 무엇이 더 문제 인가?



<그림-1> 소득분포 곡선

◆정책적 관심은 빈곤층(B)에 주어져야 함

- 양극화론자들은 '부유층/빈곤층'의 소득 비율에 관심을 둠

◆부유층(C)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C 때문에 B의 빈곤탈출이 여의치 못해서 인가. **GDP**는 새로이 더해지는 '부가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고정된 그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님
- C로 인해 B가 만들어지지 않음. 그렇다면 앞집의 김서방이 성공하면 뒷집의 박서방이 실패해야 함

◆성장론자로 인식되는 노벨상수상자 디턴(Deaton)은 지나친 소득집중은 '금권정치' (plutocracy)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

- '지대추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금권정치'는 축적된 부를 이용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 부유층(C)의 존재가 C가 금권정치를 낳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음
- 금권정치보다 더 해로운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정치. 대중이 반길만한 것은 무조건 '정책카트'에 담으려 함. '경제민주화'가 그러한 인기영합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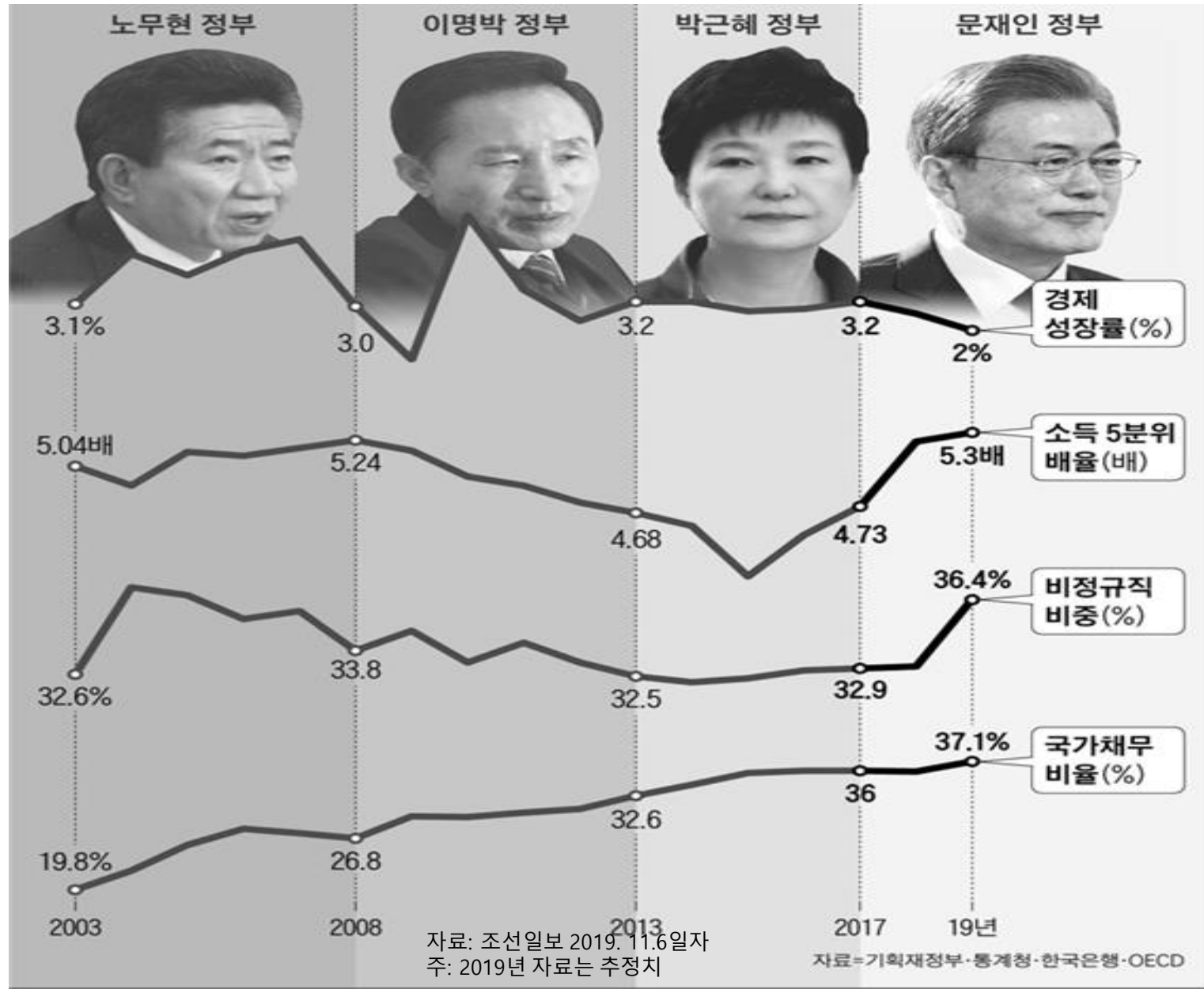
경제민주화, 2012년 이후 정책 어젠더로 전면

- ◆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경제민주화는 화두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정책의 옷'을 입음
- ◆ 던지는 질문.
 - 경제민주화가 2012 대선 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당시 한국의 소득분배는 최악의 상태 였는 가? 그렇지 않음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소득주도성장은 "분배개선을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 가. 오히려 개악되었음

<표-1> 도시(2인 이상 비농가)부문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및 소득계층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DB,KOSIS)

	1990		2015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 (중위소득 50% 이하)	7.8%	7.1	14.2	10.4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73.7%	75.4	67.3	72.6
부유층 (중위소득 150% 이상)	18.5%	17.5	18.5	17.0
합계	100%	100%	100%	100%
지니계수	0.266	0.256	0.305	0.269
5분위배율	3.93	3.72	5.67	4.20

• 4마리 토끼 모두를 놓친 문재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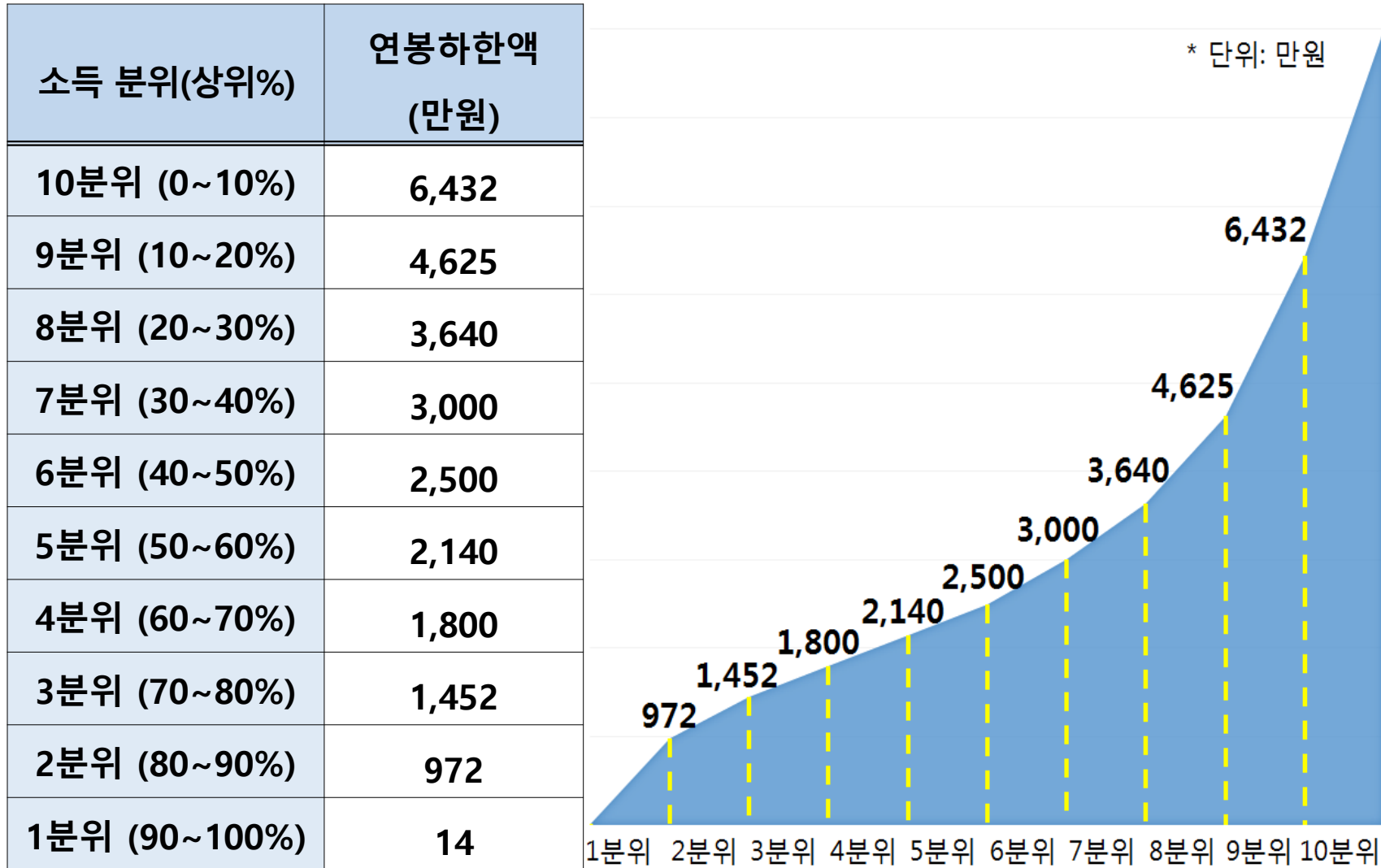
간과된 양극화 요인: 노동시장의 양극화

- ◆ 양극화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규제완화' 등이 의례적으로 거론돼 옴
- 한국사회에서 간과되어 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저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
- ◆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가져가는 가" 하는 것이 중요
- 생산성에 해당하는 '기회임금'이 지급된다면 해고를 두려워할 이유 없음. 다른 곳에서 지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것을 고백한 것

<표-2> 고용형태별 임금 및 임금총액 기초통계량(2002~2015)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수	최소	최대
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 (worker_wage, 천원)	2,141.4	377.85	14	1,456	2,696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 (tem_worker_wage, 천원)	1,259.2	151.58	14	977	1,467
상대임금 (rel_wage)	1.691	0.12	14	1.49	1.84
상대임금총액 (rel_total_wage)	3.353	0.43	14	2.62	3.96

<표-9>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 액 (2015)



주: 연봉은 정액+초과+특별급여의 합계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원시자료)

○ 어떤 이념과 가치를 택할 것 인가

◆정권을 되찾아 오려면 이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

- 자유와 보수를 부끄러워하면 절대 재집권할 수 없음
- 우파가 좌파의 용어와 사고를 갖고 좌파와 싸우면 必敗
- 고되고 지난한 길이지만, 우파의 가치로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함

◆김종인은 “이제 국민의힘을 보고 보수정당이란 소리 하지 말라”고 단언

- 보수의 색깔을 빼는 것이 변하는 것인가?
- 창조적 실용을 주창해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오버랩

◆국민의힘에 대한 말씀

- 국민의힘은 일신(一新)해야 함
- 지금도 비상대책위가 하는 상황인가
- 자조·자립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타자에 의존하는 조직은 '좀비'와 다름 없음
- 좀비가 정권을 되찾을 수는 없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